

## 전국중소기업인대회 축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힘든 노력을 하셨는지 저도 짐작이 갑니다. 각별히 성공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많은 얘기를 들었고, 저도 한때 사업이라는 데 손을 댔다가 혼이 난 일이 있어서 중소기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돌이켜 보면 한 시기도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 또한 지나고 보면 매 시기마다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 왔던 것이 우리 한국의 경제사이고 기업사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개별 기업이야 수없이 명멸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장 없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고 좌절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게 성장한 곳에서는 대개의 기업들이 다 성공을 누립니다. 총체적으로 봐서 우리 한국의 시장은 성공과 기적을 연속적으로 이루어 온 역사라고 말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모두들 힘겹고 또 미래가 불안하시겠지만 5년, 10년 뒤에 다시 돌이켜 볼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는 한국의 경제시장 전체를 “아, 그래도 우리가 기적을 이뤘구나.”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둘러보면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성과를 이루어 가는 데 크게 차질은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야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수출은 많이 되는데 중소기업은 계속 어렵습니다. 소위 양극화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인 여러분이 고통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나머지 소비진작의 문제라든지, 국민들의 소득에 있어서의 격차 문제라든지, 경제활성화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잘 안되게 돼 있습니다. 교차로 또는 병목이랄지 하는 그 위치에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수출실적이 좋은데도 소득이나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 것은 소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동반해서 성장을 이루어 내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정책의 승부를 걸어야겠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생각입니다. ‘중소기업,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 핵심적인 열쇠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소기업정책을 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다짐해도 여러분은 실감이 안 나실 것입니다. 1960년대, 1970년대, 그 이후 지금까지 역대정권이 중소기업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은 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정책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수백 가지의 중소기업정책이 있었고, 그 덕분에 중소기업이 여기까지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중소기업에 우리 경제의 문제가 다 맺혀 있습니다. 풀어야

될 문제가 맺혀 있고, 이 문제를 풀어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한다는 이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경제가 다 그런 것인가? 그런 경제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제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어렵지 않은 경제도 많이 있고, 좋은 경제일수록 중소기업이 튼튼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산업들이 균형 있게 동반성장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리로 가야 됩니다.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말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성장하지 못한 것을 참여정부가 외친다고 되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정말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진심으로 저의 고민입니다.

2003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산업자원부 보고 외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합동보고를 따로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럴 듯한 정책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1년 지나고 2004년 초에 다시 중소기업정책에 관해서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보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올라온 보고를 보면 새로운 것도 좀 있기는 있었지만, 상당수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2003년도에 저 정책 효과 있느냐고 하나하나 물어보고 재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던 정책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말하자면 1980년대에 나온 정책, 1990년대에 나온 정책이 지금도 그냥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중소기업에게는 그나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총체적으로 중소기업정책으로서 효과가 있느냐고 질문하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정책들이 그냥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6천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2004년 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책을 세웠는데, 대개 그때는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2003년 6월 말경에 일부 업종에 대한 집  
중적인 대출증가로 인해서 소위 중소기업발 금융위기 신호가 포착돼서 그때부터  
중소기업 금융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가 와 있는 상태에서 중소기업발 금융위기 신호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2004년 초에 중소기업정책을 완전히 새로 가져왔는  
데 토론 결과 일부만 채택하고 다시 하자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 7월에 중소기업종합대책회의라는 것을 일단 열었습니다.  
이때는 약 1만 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중소기업도 다 같은 중소  
기업이 아니고, 규모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고 업태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  
시듯이 천차만별의 업종업태를 놓고 각기 형편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  
니냐,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맞춤형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2004년  
7월에 첫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정부 공무원들이 기왕에 있는 정책들을 그냥 집대성한 것이 아  
니라 하나하나 검토해서 털어 버릴 정책은 다 털어 버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렇게 정책을 짰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각 업종별 단체, 그 밖에 크고  
작은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서 실제로 필요한 정책을 한번 해 보자, 이렇  
게 해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가 나왔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류 기술자를  
구할 방법이 없고, 현장에서 연구개발과 혁신활동을 하고 현장혁신을 이끌 만한  
주도적인 인재도 구하기가 어렵고, 은행돈도 빌리기 쉽지 않고, 출자를 받기도  
쉽지 않고 자연히 사람 없고 돈 없으니 기술도 그렇고, 시장개척의 어려움이 있  
다고 합니다.

각 기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런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

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대책을 이렇게 세우기 이전인 2003년 초부터 우리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전략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이었습니다. “기술혁신의 수단,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한다는 것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대학이 중소기업과 제휴하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무조건 밀어준다. 그것이 지방이면 거기에다 더욱더 우대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연구혁신 또는 기술개발의 과정과 결합된 프로젝트이면 대학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무제한 주겠다. 어떤 예산을 끌어대서라도 주겠다.” 그 시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더 모자란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확실한 프로젝트만 가지고 오면 예산은 무슨 돈을 뽑아서라도 반드시 밀어준다.’ 그 정책을 이미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이 대학교와 제휴해서 이와 같은 기술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이 중소기업 현장에 가서 일하면 그것을 학점으로 쳐주는 제도를 개발해라, 이런 등등의 지원책을 해 왔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일부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 뿐이어서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정책을 다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금융에 있어서 지원을 호소하지만, 경쟁력이 없는, 이자보상배율 이하에 장기간 머물러 있는 중소기업에까지 돈 쥐라, 보증해 쥐라, 빌려 쥐라, 이것은 정부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애로에 걸려 있다면야 그것은 미래를 보고 할 수 있겠지만 전망도 없는 중소기업에 그때그때 목숨만 연명해서 하루라도 더 이어가기, 이것도 경기를 위해서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일 뿐이지 장기적으로 그것은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지원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금융기술 수준이라든지 중소기업의 기업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기술 중심으로 금융을 하기가 어렵

고, 선진국에서도 이것이 100%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술을 보고 소위 모험투자를 하는 자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벤처 생태계를 한번 구성해 보자.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벤처는 성공률이 10% 미만의 시장인데, 특별히 잘 분석하고 엄선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들어가자. 아예 한 다리 끼어 들어가자. 공무원들의 판단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업하는 전문 투자자들하고 함께 가자.’ 그렇게 해서 소위 벤처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다음에 생태계, 인력지원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내일 모레는 영세 상공인들, 혼자서는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말하자면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시리즈판을 결과적으로 내게 됐습니다. 작년 7월에 종합판을 내고 10월인가 해서 벤처시장을 형성하는 문제 등을 시리즈로 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정책과정에서 중소기업하는 여러분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두 정책화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에서 좀 섭섭해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하던 지원책을 끊어 버린 것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전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지원수단이 그것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만들어진 금융지원수단은 저금리 시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좀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가 국무회의를 할 때나 참모회의를 할 때나 거듭거듭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래는 불러도 성과가 없는 정책은 하지 말자. 국민들 앞에 이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자.’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균형발전을 외쳐 왔지만 총론에서는 다 찬성하고 각론에 가면 다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균형발전 안됐습니다.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만을 뿐이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이런 특수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공할지 못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으나 30년 동안 총론적으로 ‘한다, 한다.’ 노래만 부르고 결과 없는 정책은 안됩니다. 물론 이전 정부도 성심껏 했으나 역부족이라 그랬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의 정책이라면서 결국 책임을 안 지는 정책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만은 마감하자, 안되는 것은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게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떤 정책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가 형성돼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믿음을 우리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원가경쟁을 시키고 아웃소싱하고 덤핑 들어온 물건을 쓰면 원가가 절감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한국의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결국 대기업의 경쟁력도 불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서로 믿고 협력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을 때 협력이 가져오는 시너지가 있지 않겠느냐? 대기업들도 이제 전략을 우리 중소기업과 함께 살아가는 전략으로 바꾸자. 이미 대기업이 상당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이 묘해서 조직이 크다 보면 관료조직화되어서 한쪽에서는 상생원리에 의한 거래라든지 규칙을 적용하고, 한쪽에서는 골병드는 중소기업 아주 어렵게 하는 정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을 해 보면 한 부처에서는 균형발전한다고 정부기관을 바깥으로 내보낸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어느 부처에서는 균형발전과 관계없이 수도권 한복판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발표해 버리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듯이 대기업들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미 상생협력의 전략을 가지고 나선 기업도 있지만 아직 따르지 않는 기업도 있고, 또 같은 기업 안에서도 어떤 조직의 성과논리가 달라서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모두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뜻을 한번 모아 보자. 손을 맞잡아서 한번 같이 해 보자.’ 그래서 동반성장, 상생협력의 다짐을 어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놓고 다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정부 정책 어느 구석에서라도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하려고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장관이 하려고 한다고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움직일지는 미지수지만, 올 연말쯤 가서는 아마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적극적이지 않고 해야 될 일을 내팽개쳐 놓고 있는 공무원들은 입장이 곤란해질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철저히 다그치고 해서 우리 정부 전 조직이 함께 뜻과 힘을 모아서 중소기업을 살려내고, 그 중소기업을 통해서 우리 경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해 나가고, 그를 통해서 소득분배도 이뤄 나가고 소비 진작도 이뤄지는 그런 경제를 한번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정책이 결코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도움이 됐지만 아직도 구조적인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여정부도 이 구조적인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장담은 못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우리 경제에서 악순환의 구조만은 한번 꼭 좀 끊어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